

2016년 미국의 주요 이슈 및 전망

2015. 12. 4

1

2016년 美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

□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예정

- 아이오와 경선('16년 2월)을 시작으로 대선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11월 8일 미국 45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
- 이번 대선은 상원의 1/3과 하원 전체에 대한 선거도 동시에 진행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개혁, 최저임금 인상, 원유수출재개 등 주요 경제이슈가 부각될 전망

- TPP가 주요 경제 및 통상정책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별 TPP에 대한 견해가 추후 미국의 TPP 비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후보들의 주요공약>

정당	후 보	주요공약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부유층 증세 및 최저임금 인상 -기업세금 탈루방지과 중산층 감세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금융규제 강화 및 총기규제 강화 -키스톤 송유관 반대 및 북극해 시추반대
민주당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중산층 살리기, 부자증세 중심으로 세계개혁 -대형 금융기관 해체, 자유무역정책 반대 -학자금, 도로건설, 의료비지원 10년간 180조 달러 투입 -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거대석유기업 세제혜택 중단 -무상의료검진 시스템 및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도드·프랭크법 완전폐지 -세율 구간 단순화해 세금감면 -법인세 15%로 인하(현재 35%) -원정출산 봉쇄 및 불법이민 방지 -대체에너지 투자와 환경보호 자금 축소
공화당	벤 칼슨 (Ben Carson)	-오바마케어 폐지 후 건강저축계좌로 의료비 부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의 10% 단일세 부과

		-화석연료 사용 보조금 지급 -키스톤 송유관 찬성 -무슬림 반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현재 7단계인 세율, 15%와 35%로 단순화 -일부 특권층에게 혜택 돌아가는 공제제도 없애거나 개혁
공화당	젠틀 부시 (Jeb Bush)	-1,100만 불법체류자 합법 신분 제공 -오바마케어 폐지 및 나이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제공 -에너지사업 규제 완화 및 키스톤 송유관 승인 -세율구간 7개→3개 단순화 -법인세를 20%까지 인하
공화당	테드 크루즈 (Ted Cruz)	

- 세계 개혁, 최저임금, 원유 수출 재개 등도 주요 경제 의제로 다뤄질 전망으로 향후 구체화될 후보별 공약에 유의주시 필요
- 또한,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지역구 내 기존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보호무역주의 성향 가중 우려

2

TPP 의회 비준 및 발효

□ 협정문 공개 의의

- '15.11.5 TPP 협정문이 협상 타결 1개월 만에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 이번 발표된 TPP 협정문은 공식 협정문은 아니며, 정식 서명 이전까지 법률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이 가능

□ 추후 추진 절차

- TPP 역내 최소 6개(GDP의 85% 이상)* 참여국이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협정 서명 2년 시점에서 60일 이후부터 발효
- * TPP 참여국 중 미국과 일본은 GDP(IMF, 2013년 기준)의 60.4%와 17.7%를 차지, TPP 발효를 위해서는 미일 양국의 국내비준 절차 완료가 선결조건

□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TPP 서명 의사 공식 통보(11월 5일)

-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촉진법(Trade Priorities Act)에 의거, TPP 협정 서명 90일 전에 서명 의사를 통보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송부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2016년 2월 3일에 TPP 공식 협정문에 서명 가능

□ UST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TPP의 경제 영향 분석 공식 요청

- 마이클 프로먼 USTR대표가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TPP에 대한 경제영향 평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한 송부(11월 5일)
- USITC는 TPA에 따라 TPP 협정 서명 후 105일 이내로 경제 영향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공해야하므로, 내년 5월 중순경에 보고서 완료예정
- 미국 의회가 통상적으로 USITC의 보고서를 받은 후에 무역협정의 비준안을 발의한 바 있어, USITC의 TPP 관련 보고서 발표 시기에 주목 필요

□ (전망) TPP 비준안, 이르면 2016년 중순에 발의 가능

-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2월에 TPP에 서명을 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서명 105일 안에 TPP에 대한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완료해야함.
- 미국 의회가 통상적으로 USITC의 보고서 제출 이후 비준안을 발의한 바 있어, USITC가 105일의 작성 기간을 소진하더라도 내년 중순에 TPP 비준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단, 무역촉진권한은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안 발의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기한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미국 통상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는 백악관이 내년 미국 대통령 주요 경선이 마무리되는 5월~6월 중순경을 적절한 비준안 발의 시기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3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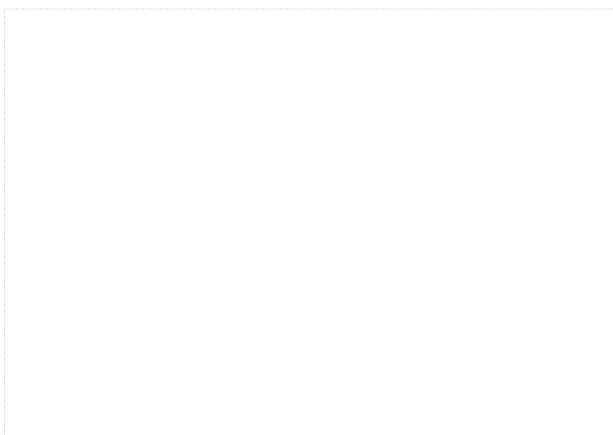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이자율, 자산 가격, 예상 및 환율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변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먼저 연준의 금리인상은 은행 간 대출이자율의 즉각적인 인상과 함께 소비자 대출이자율에 영향을 초래
-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시장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활동의 소비자들의 예상에도 변화를 유발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해외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즉 달러화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절상을 야기하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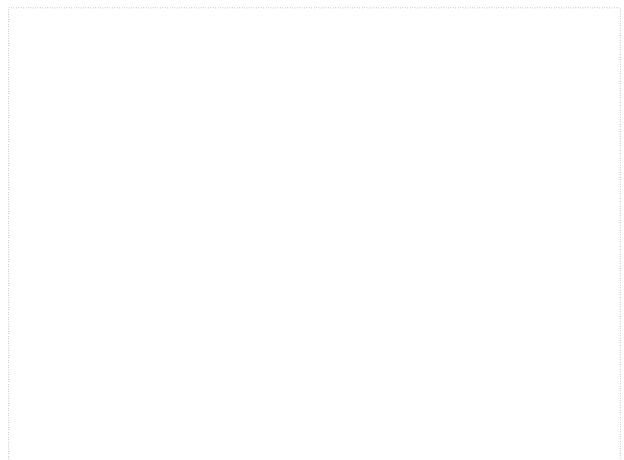
□ 4대 안전자산(금, 달러, 엔화, 美 국채)중 기준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달러화” 자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다른 통화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42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부터 반등하여 60달러까지 상승한 후 7월부터 재차 하락하여 50달러대를 하회

달러와 유가와 의 관계



달러와 금가격과의 관계



자료: 국제 금융센터 DB

- 달러 강세는 원자재가 주력 수출품인 국가들의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위 상품통화로 불리는 캐나다, 스웨덴(에너지), 호주(철광석), 뉴질랜드(농산물) 등의 통화 약세를 유발

*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금리인하 단행

- 원자재 관련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 절하도 지속되면서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원화의 약세 폭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 美 연준은 유례없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정책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 양적완화정책을 종료함과 동시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 지난 '07년 8월 美 연준은 서브프라임 발 경기둔화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5.25%→4.75%로 인하를 시작으로 제로금리(0~0.25%) 수준까지 인하

- 그러나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FOMC, '13.6)을 시작으로 테이퍼링 실시결정('13.12) 및 종료('14.10),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제시('15.6)

□ 과거 '90년 이후 美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험

- 美 금리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초경제여건이 악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 '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사태에 따른 경기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였던 미국 연준이 '94년 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은 멕시코 등 신흥국 위기의 도화선

- 반면 '99년과 '04년은 시장에 충분한 가이드언스를 주고, 각각 6회, 17회에 걸쳐 1.50%p, 4.25%p를 인상

- 더구나 버냉키 前연준의장의 테이퍼링 시사발언('13년 6월)으로 국제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겪은 경험이 존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90년대 이후)>

시기	인상시작(날짜)	인상종료(날짜)	금리인상폭(횟수)
----	----------	----------	-----------

1994년	3.00%('94.2)	6.00%('95.2)	3.00%p(총 7회)
1999년	5.00%('99.6)	6.50%('00.5)	1.50%p(총 6회)
2004년	1.00%('04.6)	5.25%('06.6)	4.25%p(총 17회)

자료: FRB(2015)

□ 금리인상은 연내 한차례 인상 후, 미국의 경제여건을 토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의 시기보다는 속도를 강조하는 미 연준의 태도를 고려했을 경우, 과거 금리인상처럼 매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의 경우도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

□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유발, 주요국 통화가치 약세가 지속될 전망

- 美는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에 돌입한 반면, 中, 日, EU는 양적완화 정책 지속 예상
 - * 중국은 작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5번, 지급준비율은 3번 인하, 일본은 최근(9.15)에도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 ECB도 양적완화(15.3~'16. 9) 기간 연장을 고려
- 대부분 신흥국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4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 해외진출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Reshoring) 증가

○ (배경)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에 따르면, '00년 당시 중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52센트로 미국(U\$17)의 3%에 불과했지만 '05~'10년 동안 연평균 19% 증가하여 '10년에는 4.5달러까지 상승
- 중국의 절대적인 인건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나, 생산성을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급속히 축소
 - * '10년 기준,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는 미국의 31% 수준이었으나 '15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
- 이 외에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등도 주요 요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전망)
미국(U\$)	16.6	18.8	22.3	26.1
중국(U\$)	0.5	0.8	2.0	4.5
중국/미국(명목임금 기준)	3%	4%	9%	17%
중국/미국(생산성 반영)	23%	22%	31%	44%

주 : 평균임금은 시간당 급여 기준

자료 : 보스턴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 미국의 R&D 투자 증가로 첨단 기술 육성 가속화

- 미국정부의 금융위기이전('04~'08년)과 금융위기 이후('10~'14년)의 산업생산기술 R&D 투자액은 43.3% 증가
- 제조업체 R&D투자도 금융위기 이전('05~'08년) 대비 금융위기 이후('10~'13년) 투자액이 18.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 특히 반도체(40.7%), 화학(22.1%), 제약(20.5%), 컴퓨터 및 전자부품(13.2%)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제조업 사업체수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03년 대비 400% 증가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감소하던 제조업 사업체수는 '13년 3분기에 '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14년 4분기에는 34만개를 기록
 - 미국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14년에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3~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리쇼어링으로 6만개 일자리가 창출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한국에 위기와 기회 모두로 작용

- 미국의 제조업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은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 확대의 기회
- 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진전 될수록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기술 확보 및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동시에 미국의 R&D 진흥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자진출 활성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

5

미국의 對 쿠바 정책 완화

□ 2차 엠바고 완화 발표(2015.9월)로 미국 기업의 쿠바사업 진출증가

○ 주요내용

- (여행) 제3국 경유 없이 양국 간 승인된 여행 및 숙박이 가능하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가능
 - (통신 및 인터넷)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국 기업의 쿠바 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쿠바産 모바일앱 구입과 모바일앱 개발을 위한 쿠바인 고용 허용
 - (상업 및 금융거래)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쿠바외 거주 쿠바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미국 영토 내 모든 사람,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 미국인 및 미국 내 체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단체 또는 기업
 - (쿠바내 주재 및 활동) 미국 사법권 관할 주체가 사전 승인된 활동*에 대해 쿠바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 설립하여 쿠바인 고용과 은행거래 가능
 - * 보도국, 농산품 및 건축자재 등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 국제특송 및 화물업체, 통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여행사
 - (송금) 가족 송금, 기부성 송금의 한도액이 완전 철폐됨
-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농업, 통신, 건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쿠바시장 진출 시도
- * (Carnival, 관광) 2016.6월부터 쿠바 취항 크루즈 노선 운항
 - * (Cargill, 농업) 시장 조사를 위한 쿠바 답사 수차례 진행, 인도주의적 현지 협력 및 진출 방안 모색
 - * (Caterpillar, 건설 및 에너지) 쿠바 시장 관심 지속적으로 표현 (2015.4월)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 쿠바 관련 서비스 개시
- 민간 직항 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양국 간 합의 조율 진행

□ 전망 및 시사점

- 작년 12월, 엠바고 완화 조치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움직임일 뿐 통상과 여행 부분의 제약은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 따라서 많은 미국 기업과 개인은 쿠바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대비 실질적인 시도나 움직임을 보이기에 어려운 여건
- 이번 기대는 현지의 예측 수준보다 높은 완화 조치 내용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에
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통신망 설치 등 분야는 아직까지 직접 진출 위험이 높아 쿠바 내 주체 또는 유럽 및 제3국 파트너와 합작을 통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
 - 반면,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지난 4월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가 성공적으로 쿠바 관련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을 모델로 많은 기업의 진출 시도가 이어질 것임.
- 이번 엠바고 완화조치 발표에서는 ‘미국 사법권 내 주체(persons subject to U.S. jurisdiction)’를 대상으로 명시해 쿠바 시장 진출 위험의 모호성을 줄임.
 - 미국 사법권 내 주체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미국 영토 내 모든 사람,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모든 기업, 미국인 및 미국 내 체류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단체 또는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해당 용어의 법률적 해석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내의 관련 이익집단들이 내어놓을 것이며, 향후 엠바고 완화 및 해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해당 분야에 한해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쿠바 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사라졌으며,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해 쿠바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을 의미
- 하지만 대쿠바 엠바고의 완전한 해제는 헬름-버튼 법안에서 정한 쿠바 내 민주적 정부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 바, 중장기적 해결 가능한 과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지 의견

<2016년 미국 대선 주요 후보들의 대쿠바정책에 대한 견해>

소속 정당	후 보 (당별 지지율 순)	대쿠바태도	비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Hillary Clinton)	찬성	
민주당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찬성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강경 반대	
공화당	벤 칼슨 (Ben Carson)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강경 반대	쿠바계 이민 2세
공화당	젠틀 부시 (Jeb Bush)	강경 반대	보수 쿠바계 지지
공화당	테드 크루즈 (Ted Cruz)	강경 반대	쿠바계 이민 2세